

사회

■ 광주 유학생 리더썬씨와 함께 광주 시내 돌아보니 ...

중국인도 헛갈리는 중국어 표지판

광주·전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광주시내 중요 시설 표지판마다 중국어 표기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표기 자체도 잘못된 것이 많아 방문객들로부터 성의가 떨어진다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광주시 중국어용 홈페이지는 정보 사량의 제목과 관련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고, 각종 통계자료도 실제와 차이가 있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중국인 유학생 리더썬(李德順·22·호남대 산업경영학과 석사과정)씨와 함께 본보 기자가 광주 지역 표지판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도로표지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만 표기돼 있을 뿐 중국어는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중국어 표기가 돼 있는 관광지·문화재 안내표지판에는 오기(誤記)가 많았다. 특히 관광객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용 광주시 지도와 웹사이트에도 잘못 표기되거나 문법상 오류가 발견돼 지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었다.

■ 리더썬씨가 본 광주 주요시설 안내문

운천사 마애여래좌상이 마애여좌상대로
운천역 표지판 錦湖地區가 金湖地區로
지하철역 '云泉'과 '舊道廟' 한자 '天' '區'로 표기
시 홈페이지 글은 프로속구단 제목은 '동물원 코끼리 출산'
기후 게시판 광주 기온·강수량 순서도 '뒤죽박죽'

광주시 서구 쌍촌동 상무중학교 앞 도로변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에는 운천사 '磨崖如來坐像(마애여좌상)'이 '磨崖如坐像來(마애여좌상래)'라고 잘못 표기돼 있었다.

도시철도 1호선 운천역 출구 표지판에는 2004년 지하철 개통시부터 '錦湖地區(금호지구)'가 '金湖地區'라고 음반 같은 뜻이 다른 한자로 표기됐다.

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 광주시가 지난해 250만원을 들여 1만부를 만든 중국어판 광주시 도에도 지하철 운천역이 '云泉'으로 적혀 있어야 하나 '云天'으로 잘못 쓰여 있었다. 또 구도청의 '구'자도

옛 區(구)가 아닌 구분할 區(구)로 적혀 있었다.

또한 국립5·18민주묘지 내에 위치한 '5·18민주항쟁 사적지 안내도'의 광주시 소개란에도 오자와 문법이 틀린 것이 여러 군데 눈에 띄었다.

광주시 중국어용 홈페이지의 광주소식게시판에는 광주우치동물원 코끼리 출산 제목에 글은 광주 시민프로속구단 창단 시민주 청약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기후 게시판에도 광주의 기온과 강수량 순서가 뒤죽박죽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욱이 인구와 교육과 관련한 통계 수치도 실제와 달리 올라

있었다. 리더썬씨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광주가 사소한 표기 잘못으로 인해 관광객이나 외국인들로부터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표지판의 표기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보는 대상이므로 신경써서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중국 전문가가 없고, 중국인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확인 후 바로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어가 외국어 표기 원칙이며, 나라마다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는 없다"라며 "표지판보다 광주 관광지도의 구체적인 표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한국을 방문한 국가별 외국인인 일본·중국·미국 순이며, 중국인 관광객은 2007년 106만8925명(전체 방문객의 16.6%), 2008년 116만7891명(16.9%), 2009년 134만2317명(17.2%), 2010년 5월까지 67만5026명(19.6%)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 상무중 앞 도로변, 운천사 磨崖如來坐像(마애여좌상)이 '磨崖如坐像來(마애여좌상래)'라고 표기돼 있다.



도시철도 1호선 운천역 출구, '錦湖地區(금호지구)'가 '金湖地區'로 잘못 돼 있다.

광주지법,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유죄

2명 벌금형·2명은 선고 유예 ... 전교조 "즉각 항소"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직원노조 광주지부 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정숙)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조(52)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석(41)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김해주(46) 수석부지부장과 김정섭(44) 정책실장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전교 법원의 시국선언 관련 1심 판결은 유·무죄가 9대 2로 나뉘게 됐다. 그동안 유죄 판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인천, 대전 흥성지원, 청주, 제주, 수원, 부산, 대구지

법 등 8곳에서 이뤄졌으며, 전주와 대전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은 가치관 정립이 안된 학생을 교육하는 특성 때문이라도 정치활동을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평화적이었고,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죄질은 그리 무겁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이에 대해 윤 지부장 등은 "법원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윤 지부장은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인 광주에서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며 "시국선언을 '표현의 자유'가 아닌, '집단행위'로만 본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지부장 등은 지난해 '미더엄버'와 '4대강' 등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상반기 종합감사

100건 적발 49명 경고

전남의 모 고교는 지난해 2~3학년 수학·상업·마케팅 과목의 객관식 시험문제를 전년도와 똑같이 출제했다. 이 학교는 2008년도에도 3학년 1학기 정보통신 시험문제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출제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변별력이 떨어지면서 내신관리도 엉망이 됐다.

전남의 또 다른 학교는 방충망 교체 등 공사대금 수천만원을 학생들이 낸 급식비로 편법 지급했다. 결국 학생들에게는 '영양가 없는' 급식이 제공됐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청과 기관, 일선 학교가 부적절한 학사운영, 회계처리 등으로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상반기 지역교육청 4곳과 직속기관 3곳, 공·사립고 6곳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100건을 적발했다.

지역교육청이 40건, 학교가 47건,

직속기관 13건 등이며 시정 26건, 개선 3건 등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신분상 조치로 49명이 경고를, 243명은 주의를 받았으며 과다지급된 8730여 만원을 환수했다.

교육과정과 학사분야에서는 60일 장기 결석자 생활지도 업무처리 소홀, 형식적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평가업무처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

인사와 학원분야에서도 영양교사 호봉 확정 부적정,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학교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 적발됐다.

시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성립전 예산 잘못된 사용, 학교비 회계 유류자금 관리 소홀,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등 시설과 회계분야에서도 20여건이 지적됐다.

이밖에 교육장 허가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한 일선 교장 10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원침 (8077) 김장두



폭행 뒤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타낸 조폭 구속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사소한 시비로 행인을 폭행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조폭 2명(23)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모(2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유동 모 주점 앞 도로에서 양모(22)씨 등 2명을 '반말을 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폭력조직의 일원인 조씨가 운영하는 다방 오토바이를 양씨 등이 주차한 승용차에 부딪혀 부상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화순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19일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 심리로 열린 전 군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5월 화순지역 번영회장 6명에게 모두 700만원을 주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식사와 쇠고기 등을 제공한 혐

의로 기소됐다.

전 군수는 또 지난 2008년 6월에도 화순군 번영회협의회장 취임식 기념 수건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에 건넨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오모(6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오씨는 6·2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29명의 민주당 당비를 대신 납부하고, '인사 청탁'을 빌미로 1억7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금품선거 의혹 해남 민주당 당직자 긴급체포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19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당직자 A(54)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A씨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남지역 일부 이장에게 돈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수사팀을 해남으로 파견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해남의 일부 이장들이 6·2 선거에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해남군수 지인인 B(51)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B씨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 작업을 통해 B씨와 A씨 등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로 역대 사기

목포경찰, 5명 검거

목포경찰은 19일 인터넷 상에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를 개설해놓고 구매자들의 돈을 가로챈 고모(23)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정모(2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은 지난 2월 26일부터 나흘

간 모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순금과 컴퓨터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7명의 구매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등은 안전거래사이트를 허위로 개설한 뒤 돈만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내 선물을 입고 댄 여자 만나는 꼴 못봐"

○...해어진 남자 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가지고 나온 20대 여성이 주거침입죄로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안모(여·26·광주시 서구 광천동)씨는 19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동구 소재동 조모(27)씨의 집에 들어가 조씨의 옷과 허리띠 등 시가 62만원 상당의 의류를 들고 나와 가위로 잘라버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일주일 전 이별 통보를 받은 안씨는 조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는데, 안씨는 경찰에서도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다른 여자 만나는 꼴을 못 보겠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ovieholic, MEGABOX, and CINUS theaters, listing movies and showtimes.